



보험연구원 연차보고서

20
22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22

연차보고서

2023.1

CONTENTS

I

2022년 연구 활동

Chapter 01

본업 역량 강화

- 4 중소기업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사업연속성계획(BCP) 중심
- 5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 6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평가와 개선 방향
- 7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 8 사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경영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9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 경영
- 10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 11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Chapter 02

시장 혁신

- 14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 15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 16 디지털 보험회사 사업모델 연구
- 17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 18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 19 보험시장의 미래: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 20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현황과 과제
- 21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경제학적 고찰
- 22 디지털 치료제 현황과 전망
- 23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연구

Chapter 03

소비자 신뢰

- 26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 27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 28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 29 2022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 30 인구고령화가 건강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을 활용한 정량화
- 3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Chapter 04

ESG 경영

- 34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35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Chapter 05

전망과 과제

- 38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Chapter 0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40 국가재보험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상체계 중심으로
- 41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업법 체계와 구조 정비방안 연구
- 42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 43 연금충당부채 적정 할인을 산정방안

Chapter 07

금융·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 | CEO Brief

- 46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 46 2022년 보험시장 성장과 과제
- 46 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47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 47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방향
- 47 보험모집시장 진단과 과제
- 48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 48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 48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I): 건강보장 정책 방향
- 49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 49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49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 50 금융플랫폼 정책에 대한 논의
- 50 GA시장 변화와 전망
- 50 소비자물가에 대한 대내외 거시변수 영향 및 전망
- 51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CONTENTS

- 51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 51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 52 건강보험 정책 방향
- 52 2023년 보험산업 과제
- 52 환율의 쏠림 가능성 및 시사점
- 53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보험산업 과제
- 53 신용생명보험의 현황 및 과제
- 53 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 54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KIRI 리포트

- 55 세대별 보험상품 가입 변화와 시사점
- 55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방향
- 55 지역별 인구가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 56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 56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 56 팬데믹 이후 주요국 경제 회복의 특징 비교
- 57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활동 행태와 시사점
- 57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추이와 시사점
- 57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 58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 58 최근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 변화의 특징
- 58 가계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호도 분석
- 59 국내 등록외국인 보험가입 현황과 시사점
- 5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 5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60 IFRS17 도입과 생명보험 성장성 지표
- 60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60 코로나19로 확인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 61 1인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 61 소비자물가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및 시사점
- 61 보험회사의 탈석탄 현황과 과제

- 62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 62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 62 금융시장 변동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 63 실손보험금 청구 경험 조사결과와 시사점
- 63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 63 설계사 소득하락 원인과 평가
- 64 임베디드 보험 사업모델의 이해
- 64 소비자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 차이 및 시사점
- 64 최근 생명보험회사 신계약가치 추이와 시사점
- 65 종신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 65 최근 금리변동과 저축보험 동향 및 시사점
- 65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빈도 분석
- 66 환율의 쏠림 가능성과 시사점
- 66 전속설계사의 분포와 시사점
- 66 국제유가로 바라본 소비자물가 전망과 시사점
- 67 가해 운전자 나이와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특징과 시사점
- 67 글로벌 보험 산업 및 인슈어테크 트렌드: ITC Vegas 2022를 중심으로
- 67 합계출산율의 개념으로 본 혼인 및 출산 문제
- 68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 69 지난 10년간 손해보험회사 상품구성 변화
- 69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영향
- 69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전쟁면책 적용 논쟁
- 69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①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 70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② 소비자 기대 변화와 디지털 전환
- 70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③ 상품수요 및 보험유통시장 변화
- 70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④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과 보험산업
가치 제고
- 70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⑤ 자산운용 환경 변화와 고려사항
- 71 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71 IPMI(International Private Medical Insurance) 시장 현황
- 71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 71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 결과와 시사점

CONTENTS

72	디지털 혁신의 딜레마: 금융 vs. 비금융
72	장기국채선물과 보험회사 금리위험 관리
72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72	오픈뱅킹시스템의 성장과 시사점
73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73	거시금융환경 변화와 생명보험 해지율
73	고객경험에 주목한 체험형 비즈니스모델의 확산
73	퇴직금의 IRP 이관 의미와 한계
74	개인형 IRP 및 개인연금 경쟁도 변화와 시사점
74	사이버 공격 증가와 국내외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74	보험산업의 부동산 PF 대출
74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및 영향
75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75	그린워싱(Greenwashing) 위험과 보험산업 대응
75	일본의 보험대리점 업무품질 평가제도 도입과 시사점
75	자동차 및 의료이용량 변화와 손해보험 수익성
76	최근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
76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 대비 방안
76	표준형 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76	이혼율 왜곡 현상에 대한 논의
77	식량안보와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의 활용
77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사적연금의 관계
77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
77	보험산업과 탄소배출 Scope 3
78	코로나19 전후 소비 선호도 변화와 보험 지출
78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78	제3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78	보험금 지급심사 중 소비자 불만족 경감방안
79	저축보험 해지 관심도 증가와 시사점
79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79	인플레이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KIRI 보험법리뷰

- 80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I)
- 80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규제 관련 판례 검토
- 80 IFRS17 도입 관련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개정 사전예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8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 81 DLF 불완전판매 관련 판례 검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심으로
- 81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 82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 82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 82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
- 83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 83 백내장 수술의 입원치료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검토
- 83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 83 NAIC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의 개정 내용과 특별이익 규제에의 시사점
- 84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 84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과 특별이익 규제
- 84 보험 민원대행과 변호사법 위반 문제
- 84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85 2022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영상자료

- 86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 86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 86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 86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 87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 87 자율주행차와 보험
- 8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1부)
- 8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2부)
- 88 중국보험의 현황과 특징
- 88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1) - 노인으로 잘 살아가려면?

CONTENTS

- 88 금융시장 변동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 88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 89 1인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 89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
- 89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2) - 노후자금 계산: 전문가 VS 개인
- 89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 90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 90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90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3) - 연금으로 살아가기
- 90 제3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 91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IRP 알아보기!
- 91 표준형 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II

온라인홍보 서포터즈

- 95 목적
- 95 모집 및 운영 계획
- 95 서포터즈 선발 및 발대식
- 96 활동 및 결과
- 96 해단식 및 시상

III

2022년 대외활동

Chapter 01

대외세미나

- 100 금융플랫폼 정책, 바람직한 방향은?
- 101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 102 임베디드 금융과 보험
- 103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104 데이터경제와 지속가능보험
- 105 보험산업 디지털혁신의 비전과 추진전략

- 106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방안
- 107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Chapter 02

산학세미나

- 110 MZ세대의 금융상품 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 111 Private Efforts, Public Policy and Insurance against Pandemic Health Risks
- 111 기후위기와 보험산업
- 112 금융소비자를 위한 코인경제와 조각투자의 이해
- 112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11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과 법적 쟁점
- 113 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 114 Risk & Opportunity in global insurance asset management industry
- 114 보험가격 규제
- 115 일본의 보험시장 관련 최근 동향

Chapter 03

포럼

- 118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을 이용한 지수형 보험
- 118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 119 자동차보험 손해 급수 개정 방향
- 120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 120 IFRS 17 시행에 따른 주주배당 가능이익 영향 및 과제
- 121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 시행과 계약자배당 제도
- 122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 122 백내장 수술 관련 소송에서의 쟁점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124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125 작업반/회의 참여
- 126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CONTENTS

- 127 언론기고
- 128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IV

2023년 주요 연구계획

1. 보험시장 리스크관리

- 130 보험사기 판례 연구
- 130 국내 중소기업 일반손해보험 가입·수요에 대한 연구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확장성)

- 13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 131 자산관리시장 전망과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 131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 132 보험산업과 데이터 거래소
- 132 건강보험 정책·제도 변화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132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 133 주요국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133 우리나라 치매 정책에 대한 연구

3.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역동성)

- 134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규제 개선방향
- 134 보험모집 수수료에 관한 연구
- 134 채널 다양화 성과 및 개선 방안 연구

4.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지속가능성)

- 135 IFRS17 영향 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 135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 135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 136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 136 의료자문 및 의료심사제도에 대한 연구

5.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37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V

2022년 일반현황

- 140 경영비전
- 140 연혁
- 141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142 임직원 현황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 이슈보고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

|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 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 KIRI 영상자료

보험산업 관련 주요 이슈의 핵심 내용을 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시

|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 CEO Report 및 CEO Brief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 포커스·이슈 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웹 격월간지 『KIRI 보험법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 보험동향·해외보험동향

분기별 연 4회 국내외 경제·금융 및 보험산업 주요 동향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보험시장의 최근 주요 이슈와 뉴스를 국내 보험관계자에게 제공

| Korean Insurance Industry

보험산업의 환경, 제도, 동향, 주요 경영실적을 연 1회 영문으로 소개

I

2022년 연구 활동

- Chapter 01 본업 역량 강화
- Chapter 02 시장 혁신
- Chapter 03 소비자 신뢰
- Chapter 04 ESG 경영
- Chapter 05 전망과 과제
- Chapter 06 금융·보험 이슈 연구

Chapter 01

본업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사업연속성계획(BCP) 중심 -
-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
-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평가와 개선 방향 -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
- 신화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경영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 경영 -
-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
-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중소기업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사업연속성계획(BCP) 중심

한상용(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국내에서 재해 증가와 코로나 19 확산은 중소기업의 사업 연속성계획(BCP)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왔다. 정부·지자체·금융기관·보험회사 등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연속성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있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지원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연속성계획 수립과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업계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발전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

국내에서 재해의 증가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인적 및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들은 중소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왔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영업중단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상품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돕기 위해서 정부는 사업연속성계획 우수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사업연속성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사업연속성계획 지원 정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사업연속성계획의 성공적 구축 및 실행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강성호(선임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연구 배경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배구조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지배구조 변화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퇴직연금 지배구조 변화가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지배력 증가가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B형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현행 계약형 외 기금형 도입 등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금형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이슈와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내용

자본시장의 미성숙,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 도입은 지연되어 왔으나, 2022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구조가 보완되어 사업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와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기금형 중심의 지배구조로 나타났다.

기금형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퇴기금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지배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대기업의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B형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산업은 적극적 투자전략 모색, 경쟁사와 상생연계전략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평가와 개선 방향

김혜성(연구위원)·장동식(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대재난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했다.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국가 개입과 민영 역할 활성화, 효과적인 공·사 간 거대재난 손실의 자원 조달시스템,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총보험비용 관리의 측면에서 국내 운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를 제약한 요인을 깊이 있게 다루어 공사협력 모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민영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였다.

국내에서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에 기초한 4개의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유형의 거대재난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모델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들의 운영 구조와 현황, 제도의 변화과정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공사협력모델의 성공 요인을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국가 개입과 민영 역할 활성화, 효과적인 공·사 간 거대재난 손실의 자원 조달 시스템 구축,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총 보험비용의 관리(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통제, 리스크의 예방과 손실 경감 조치의 내재화)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의 문제점을 밝히고 분야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은 운영 주체의 한 축인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리스크조정 수익률, 원보험 정책 및 재보험 정책의 변동성 측면에서 조명했다.

또한, 초과손해를 방식에서 손익분담 방식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재보험 제도 변경의 효과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손익분담 방식 도입 목적은 국가 재정 부담의 절감 또는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제도는 민영 보험회사 자본 참여를 제약하고, 고손해를 환경에서 국가 부담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공사협력 모델을 국가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

공사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영 보험산업이 보험 판매와 리스크 예방 및 경감 측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충분한 리스크 보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보험 및 재보험 정책을 통해 민간 자본에 리스크조정수익률을 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전용식(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본고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 13, 14급)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고 규모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배경

본고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 13, 14급)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고 규모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물배상 청구 건수 대비 대인배상 청구 건수 비율인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일수 등을 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경상환자의 진료행태를 계량경제모형으로 분석하여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였다.

주요 내용

자동차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추정된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 진료비 1조 원의 34.8%에서 37.1%,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추정된 규모는 61.9%에서 64.5%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최대 3만 원, 손해율 기준으로는 최대 4.6%p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의 29.3%의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분석되었고, 과잉진료 의심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상해의 심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진료 기간과 진료비 관련 규정 부재, 진료비에 비례하는 합의금(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 유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본질인 정보 비대칭성 완화 목적의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 차선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둘째, 진료행태와 치료비 부풀리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셋째, 합의금 등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경영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전용범(한국보험계리사회 부회장) | 보고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및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변화를 담은 신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대응 가운데 일부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도입 상황을 점검하여 보험회사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IFRS17은 원칙 위주로 정의되어 있고, 부채의 시가평가라는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및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변화를 담은 신회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대응 가운데 일부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도입 상황을 점검하여 보험회사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오랜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보험산업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을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담은 원칙주의 회계는 기존 회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회계기준 전환 시점의 자본금 변화, 시행 이후의 연도별 손익규모 등을 추정하고 위험요구자본의 적정규모와 지속적 손익 유지를 위한 치밀한 대응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보험회사가 신회계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을 업무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기준서 관련 보험회사의 주요 검토과제를 살펴보고,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현재 판매상품의 장·단점과 주력상품을 선별하고 개선할 상품을 결정하며, 재무 영향분석에서는 각종 최적가정과 결산 방법론의 대안을 도출하고 전환 시점, 이후의 지급여력 수준, 손익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의 사업전략에 대한 기본방향도 검토한다. 채널전략은 방향성과 채널-상품-고객(CPC) 전략과 연계한 운영방안 재정립, 상품전략은 수익성 및 자본효율 중심의 상품개발과 개발역량 강화,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는 ALM 기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관리는 장기 가치 중심과 관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였다. 마스터 플랜에서는 업무영역별 실행계획수립, 영역별 조직이행방안과 시스템구축 사례를 살펴 보았다.

한편 관리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영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경영계획 수립, 손익관리 및 성과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일부 사례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보험회사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 경영

노건엽(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이승주(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과거에는 부채시가평가 도입으로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부족을 염려하였으나 도입시기를 맞이한 지금은 제도 완화,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상황이 변화하였다. 제도 도입준비 초기에는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수익성 높은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로 인해 매출 확대가 곧 가치 경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경제적 실질이 회계상 반영되어 상품개발, 자산운용, 자본 및 손익관리, 성과평가 등 경영전략이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IFRS17 도입이 일으킬 보험회사의 주요 지표 변화, 지표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유인을 점검해 보고 주요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혹은 보험회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 실행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내용

과거에는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인해 자본부족을 염려하였으나 도입시기를 맞이한 지금은 그 양상이 달라졌다. 제도 도입 준비 10년 동안 보험회사의 자본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 국면에 도달하여 부채 증가는 완화되었다.

제도 도입 준비 초기에는 매출보다는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거에는 매출 확대를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가 많았지만, 이제는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해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뿐만 아니라 상품별 수익성 분석, 회사별 설문조사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보험회사의 매출 확대가 곧 가치 경영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특히 건강보험 위주의 영업전략이 전개되어 생존보 업권 내 그리고 업권 간 경쟁이 현재보다 더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①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가정관리 유도, ② 공시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정성희(선임연구위원)·김경선(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그동안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의 지속적인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를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비급여의 관리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청구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비급여 관리 체계의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공·사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투입 자원(총 20조 원 이상)에 비해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진료수가가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를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2020년 9월) 이후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 렌즈)의 진료수가·진료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공·사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나, 정보 우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급여의 공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먼저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비급여의 과잉 공급을 정책 시행 전에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민관 협의 채널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 기전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운영을 제안한다.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고 시 보상기준, 즉 책임법제와 보험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유자책임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자동차 사고 책임법제와 보험제도가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적용 가능한지,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요국들은 기존의 보상기준을 자율주행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즉 책임법제와 보험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자율주행차 시대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어 온 보상기준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를 우선 검토해보아야 한다.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은 피해자의 신속·적정한 구제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자의 책임과 의무는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자율주행차 보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행위’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담당하지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그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한 독일과 일본은 기존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유자 중심의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종전에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던 보상기준을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이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상이하나, 대체로 종전의 보상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기존의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현재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 및 상용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및 상용화 확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보상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Chapter 02

시장 혁신

-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
- 디지털 보험회사 사업모델 연구 -
-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
-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
- 보험시장의 미래: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현황과 과제 -
-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경제학적 고찰 -
- 디지털 치료제 현황과 전망 -
-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연구 -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박희우(연구위원)·이승주(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업은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써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하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은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외부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도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예상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교화, 언더라이팅 효율성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써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잠재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겠지만,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양승현(연구위원)·손민숙(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금융회사가 업(業)의 성격과 현황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제가 산재함으로써 불명확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 내부통제에 관해 여러 법률상 요구되는 내용적·조직적 요건을 정리·검토하고, 향후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한 쟁점에 관해 논한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규율하나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 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하는 등 수법자와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에 관련 규제가 산재한다. 이로 인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내용 및 적용관계 등에 관해 불명확성이 존재하는바,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 내부통제에 관해 법률상 요구되는 내용적·조직적 요건을 정리·검토하고 향후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한 쟁점에 관해 논한다.

주요 내용

본고에서는 먼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을 (i)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ii) 보험업법, (iii) 금융소비자보호법, (iv) 특정금융정보법, (v) 개인정보 보호법, (vi) 신용정보법 및 (vii) 전자금융거래법 순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으로는 ① 법령 간의 내부통제 규제 간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②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③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수행업무 총괄담당자, ④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등 운영조직, ⑤ 위반 시 제재 등 항목별로 각 법령 간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고 적용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크게 내부통제기준과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조직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각 법령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는 병렬적으로 적용되므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의 모순 발생 등 세부 항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운영조직에 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에서도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아가 법령별로 규율사항에 대해 총괄담당자와 지원조직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불명확성 내지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효적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독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험회사 사업모델 연구

손재희(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보험소비 고객 경험 제공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적인 측면과 제공 가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디지털 보험을 정의하였다. 디지털 보험이란 보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디지털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인슈어테크와 달리 디지털 보험회사는 보험사업 면허를 가지고 디지털 보험을 직접 개발·판매하거나 디지털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장 환경,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 회사의 역량에 따라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디지털 보험회사는 초기에는 단순한 상품 제공 사업모델로 시작하되, 향후 시장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모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보험소비 고객 경험 제공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고, 제공 상품 및 서비스 등 사업모델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보험회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디지털 보험이란, 보험 밸류체인 전체 혹은 일부에서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디지털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디지털 보험회사는 이러한 디지털 보험을 직접 개발 및 판매하거나 디지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회사는 기존 인슈어테크와 달리 보험 인가를 받아 직접 디지털 보험을 개발하고 지급여력 책임을 가진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설립방식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디지털 보험회사가 형성된 반면, 아시아에는 기존 대형 보험회사와 대형 ICT회사의 합작에 의한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다. 사업모델도 지역별로 다른데,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 보종에 걸쳐 인슈어테크가 보유한 플랫폼 및 솔루션 역량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 또는 상품과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시아는 젊은 고객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생명·건강 보험상품의 쉽고 빠른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보험회사는 시장 환경,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 회사의 역량에 따라 사업모델이 달라진다.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초기 디지털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상품 제공에 중점을 두되, 향후 시장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반 서비스 연결 및 독자적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등 사업모델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백영화(연구위원)·손민숙(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특별이익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이익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인한 경쟁 촉진 효과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험 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이익 등을 특별이익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특별이익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로서 제안해보았다.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새로운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을 시도하고자 할 때 그러한 방식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규제의 내용 및 기존의 해석 사례들을 분석·정리하며, 보험 시장에서의 새로운 마케팅 및 소비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 관련 향후 개선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모집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보험업법 제9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들도 있으며,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문언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들 사이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이익 제공은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를 허용해주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규제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이익 등을 특별이익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보았다.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임준(연구위원)·이승주(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과거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디지털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상시적 사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① 법률 제도, ② 시장 기반, ③ 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디지털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상시적 사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① 법률 제도, ② 시장 기반, ③ 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시장 기반의 경우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수요기관 육성을 위해 시장을 통한 접근법과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후자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부실채권시장의 공적 구조조정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런오프 전문 공사 설립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경우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부채가액-자산가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계약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험시장의 미래: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황인창(연구위원)·손재희(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산업이 직면한 성장성·수익성의 추세적 하락과 소비자 신뢰 저하는 근본적으로 보험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비대칭성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경직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디지털혁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보험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을 소비자, 공급자, 규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외와 비교해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디지털전환의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전환의 필요성 자체는 다르지 않으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디지털전환 로드맵 수립이 미흡하고, 실행계획 추진 시 조직적 저항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범위의 경제 추구, 소비자 중심 사업모형 개발, 원활한 사업 재조정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추진전략, 혁신 인프라, 조직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보험산업이 당면한 정보비대칭성, 사업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회사의 디지털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통한 시장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①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필요성을 논의하고 ② 해외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③ 국내 보험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주요 내용

보험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을 소비자, 공급자, 규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고, 보험구매에서의 디지털화를 기대하며, 가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의 고령화로 보험회사의 노동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변화되며, 경쟁구도가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디지털전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장기 경영전략이 디지털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 추진 초기에는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최근에는 사업모형 개발 및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전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해외와 비교해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디지털전환의 속도가 느리고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전환의 필요성 자체가 다르지 않으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디지털전환 로드맵 수립이 미흡하고, 실행계획 추진 시 조직적 저항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범위의 경제 추구, 소비자 중심 사업모형 개발, 원활한 사업 재조정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디지털전환과의 관계 명확화, 디지털전환 인프라 마련,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현황과 과제

정성희(선임연구위원)·김경선(연구위원)·김연희(연구위원) | 보고서

국민 의료비를 보험 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고, 서로 다른 진료수가 적용 및 심사·평가체계로 인해, 동일 증상·상병임에도 보험제도에 따라 의료비용·이용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원 보험제도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됨에 따라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 혹은 국민 후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 지원 보험제도로 사회보험의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보험의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불일치와 관련된 그간의 주요 쟁점들을 보험급부와 보험금 관리체계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의료비 보장 보험제도 중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민영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됨에 따라 제도 간에 여러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보험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중보상 금지라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따라 중복보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 보험제도의 보상 성격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 혹은 보험자 간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의료보장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제도별 급여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제도 선택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료보장제도 선택권을 현실성 있게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재·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타당한지, 각 보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차등 수가를 적용함에 있어 환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제도별 보험금 청구·심사·지급체계에 대해서 상이하게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경제학적 고찰

석승훈(서울대학교 교수)·홍지민(숭실대학교 부교수) | 보고서

연구 배경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미소보험을 “위험의 가능성 및 비용에 적합한 보험료 지급을 대가로 특정 위험으로부터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소보험은 금융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거나, 소득의 변동성이 매우 큰 저소득계층을 그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 이외에는 전통적인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미소보험(Microinsurance)이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저가의 보험료로 낮은 보상수준을 제공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미소보험이라는 용어의 등장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미소보험의 수요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낮은 보험수요의 원인을 검토하고 수요 진작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요 내용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기존 문헌들의 검토 결과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요, 공급,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 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징,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치료제 현황과 전망

손재희(연구위원)·양승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와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이가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도 최근 디지털 치료제 적용 시 비용을 보장하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강화를 위해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와 협업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연구 배경

데이터 및 기술에 바탕을 둔 효율적 치료에 대한 요구 증가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 조사를 통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불어 글로벌 보험회사의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디지털 치료제 활용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건강한 삶에 대한 니즈 증가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넘어 직접적인 질병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니즈 변화는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AI, VR, AR,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기술)를 말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와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와 차이가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과 투자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디지털 치료제 효과와 시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험회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전략의 하나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회사와 파트너십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초기 단계지만 최근 보건당국과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국내 디지털 치료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보험회사도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에 대해 선제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으로, 우선 국내외 디지털 치료제 시장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파트너십 혹은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디지털 치료제 개발 상황에 맞춰 향후 보험상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연구

임준(연구위원)·정성희(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를 급증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가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지속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앞서 비슷한 구조적 적자 문제와 시장 철수를 경험했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 분석을 통해 ① 상품개발, ② 구조조정, ③ 세제지원의 3가지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를 급증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가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지속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앞서 비슷한 구조적 적자 문제와 시장 철수를 경험했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분석을 통해 ① 상품개발, ② 구조조정, ③ 세제지원의 3가지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09년 표준화 이후 주로 손해를 개선에 초점을 두고 상품개발이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적자 사업의 구조조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했지만 향후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시장 철수 이슈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적자 사업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제도 관련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고령자의 상품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상품수용성 제고 수단의 하나로 조세지원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주로 근로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과 보험료 납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작 문제가 되는 퇴직 후의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건강저축계좌처럼 근로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해놓았다가 퇴직 후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Chapter 03

소비자 신뢰

-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
- 자동차보험 손해 급수 개정 방향 -
-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
- 2022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
- 인구고령화가 건강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을 활용한 정량화 -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의 역할 확대 및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약관 해석 원칙이다. 그런데 판례나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미와 요건에 대한 오해에 기반하여 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러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 근거, 부작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보충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전용식(선임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강윤지(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해 급수의 문제점은 첫째,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둘째, 객관적 입증 가능 상해와 그렇지 않은 상해의 병존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들 수 있다. 풍선효과는 제도적 변화 등으로 특정 상해의 진료비는 줄어들지만 다른 상해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한방진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풍선효과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방안인 대인배상Ⅱ 과실상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상해 급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11급 뇌진탕의 경우 진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상해 급수 하향 혹은 12~14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해 심도 반영을 위해 치료비 한도 재검토, 급항 조정 등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해 급수의 문제점과 진료비의 관계를 분석하고 상해 급수의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주요 내용

상해 급수의 문제점은 첫째,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둘째, 객관적 입증 가능 상해와 그렇지 않은 상해의 병존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들 수 있다. 풍선효과는 제도적 변화 등으로 특정 상해의 진료비는 줄어들지만 다른 상해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한방진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풍선효과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방안인 대인배상Ⅱ 과실상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상해 급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해 급수의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실제 치료비와 현실성 있게 균형을 맞추고 동일 치료가 필요한 동일 상병의 경우에는 통합을, 퇴행성 질환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형평성을 훼손하는 상해 급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11급 뇌진탕의 경우 진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상해 급수 하향 혹은 12~14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회사는 시장포화로 신계약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고객 이탈로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손익관리,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마케팅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유지율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측면에서 유지율 결정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객창출 또는 고객획득과 유지에 있다. 대량으로 상품이 팔릴 수 있던 과거에는 신규고객획득이 중요했으나 시장이 포화되고 고객중심 환경으로 변화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객 획득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가 보험회사 매출, 마케팅 비용, 보험회사에 대한 평판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주요 내용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상품 유지와 해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보험료 납부능력과 관련된 보험계약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지만, 보험회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과정 및 보험계약 유지과정에서 고객과 보험회사 또는 고객과 판매자 간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보험해지가 발생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국내 보험산업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이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특징은 계약체결 후 특정 시점에 보험가입자의 해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장기계약 유지율 실태와도 대조적이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회사의 장기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외형성장 전략하에 신계약 위주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모집인들이 소비자들의 보장수요, 보험료 부담 능력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상품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변화 추이와 특징, 보험회사의 유지율에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별 보험계약자 단위에서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국가에서 유지율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정책사례들과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 차원에서 추진하였던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022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변혜원(연구위원)·송윤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소비자실험을 통해 안내정보의 내용이 추가심사에 대한 소비자의 수급도에 영향을 미치며, 전달 정보에 대한 신뢰도,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 미래 의료소비에 대한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공 정보 요소 중 추가심사 기준을 설명 받은 집단의 보험회사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수급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명확한 추가심사 기준 제시가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은 보험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최근 민영건강보험 심사기준 강화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 경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고, 실험을 통해 추가심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의 불만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심사 요소 중 보험금 지급 처리기간, 사실관계 확인이나 의료적정성 판단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진료기록사본 발급이나 수사기록 열람에 대해 응답자의 79.3~85.3%가 수급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부지급에 대한 수급도는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무작위 대조실험으로 진행된 소비자실험은 가상의 보험금 지급심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달 정보를 달리하여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에 대해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수급 정도를 확인하였다. 각 실험집단에 사용한 정보 요소는 ① 추가심사의 이유와 상호주의, ②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③ 추가심사 기준, ④ 손해사정사 선택권이였다. 실험결과, 안내정보의 내용이 추가심사에 대한 소비자의 수급도에 영향을 미치며, 전달 정보에 대한 신뢰도,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 미래 의료소비에 대한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추가심사 기준을 제공한 집단의 경우 보험회사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수급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명확한 추가심사 기준 제시가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 과정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인구고령화가 건강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을 활용한 정량화

김세중(연구위원)·임태준(동국대학교 교수)·김유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본 보고서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SGE 모델)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하고,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개인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하며,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델)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하고,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내용

연구결과,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의 고연령 노동공급 확대, 확대된 은퇴기간의 경기변동성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이 예측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총노동은 감소하고 개인의 저축유인 증가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이 미래 소비를 위한 자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연금보험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을 의미하며, 고령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는 질병과 상해 등 노동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소득상실 및 상해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은 투자형 상품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유족에 대한 보장 수요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 민간의료보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저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수요 또한 정점을 찍고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前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김동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는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총 4부 제17장으로 구성된다. 제1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총론), 제2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각론), 제3부 퇴직연금의 세제·회계, 제4부 주요국의 퇴직연금제도 등이다.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순수한 이론과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퇴직연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금개혁의 역사를 보면 공적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적연금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보장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노후보장적 수준을 파악하려는 지식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퇴직연금 총서의 발간을 통해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주요 내용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는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총서로 퇴직연금의 이론과 실제를 포함하고 있다. 동 총서는 제1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총론), 제2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각론), 제3부 퇴직연금의 세제·회계, 제4부 주요국의 퇴직연금제도 등 총 4부 제1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한국형 퇴직연금의 구조, 퇴직연금의 도입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각론)에서는 퇴직연금의 수리·재정, 퇴직연금 부채 및 재무건전성,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 퇴직연금의 연속성 규제, 퇴직연금 계약이전 및 종결, 퇴직연금의 감독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3부 퇴직연금의 세제·회계에서는 퇴직연금의 세제, 퇴직연금의 회계로 구성되고, 제4부 주요국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영미권 국가, 아시아권 국가, 유럽권 국가로 구분하여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총서 내용은 전반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으로 전개되는 기존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순수한 이론과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퇴직연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총서는 연구보고서가 아닌 총서 형태로 발간되었다. 따라서 이번 총서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퇴직연금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Chapter 04

ESG 경영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준(연구위원)·이연지(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우리나라에서 ESG 평가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 단위에서 중요성 평가를 통하여 고유 사업모형에 따라 ESG 요소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사업모형에 반영하여 통합시키는 ESG 경영을 통해 나온 ESG 성과를 지속가능공시로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투명하게 시장에 전달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시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성 평가를 거친 실질적인 ESG 경영의 성과가 잘 정해진 지속가능공시를 통해 세상에 나오면, 이는 양질의 기업 ESG 데이터이며 동시에 효과적인 ESG 평가를 위한 기반이다. 이 기반 위에서 ESG 평가회사는 효과적인 ESG 평가를 위하여 산업과 기업의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여 ESG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ESG 평가와 ESG 경영평가 자료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와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요건도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립될 필요가 있다.

ESG 평가란 기업이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재무 성과를 시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지속가능 경영에 충실한 기업으로 자본이 배분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업의 ESG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여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이 연구는 ESG 평가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평가방법론이 발달한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외 ESG 평가시장의 현황과 함께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한다.

ESG 관련 데이터 및 평가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관련 회사들 사이에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약 150여 개 회사가 시장에서 활동 중이다. ESG 평가의 주요 수요층은 금융투자자(자산관리자 및 자산소유자)와 투자은행으로 지역적으로는 EU의 ESG 관련 보고 및 공시 규제 강화로 60% 이상의 수요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북미는 1/3을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의 수요는 아직 미미하다. 또한 ESG 평가방법의 투명성 및 일관성 그리고 정보보호 및 이해상충과 같은 여러 문제가 노정되면서 평가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인 미국 MSCI와 영국 FTSE Russell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들 ESG 평가회사는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하여 기업의 노출 및 관리 수준에 맞추어 성과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점수 또는 등급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ESG 평가를 수행한다.

향후 국내 ESG 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공시 활성화를 통한 평가자료의 축적과 회사별 중요성 평가를 통한 ESG 요소의 경영 통합, 그리고 기업 및 산업별 ESG 평가지표의 세분화를 통해 사업모형이 반영된 ESG 평가가 필요하며 기업 정보보호 및 ESG 자문과 평가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등 잠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박희우(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로 위험조정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 보험회사 ESG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빠르게 ESG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최근 ESG 통합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 확보, 내부 전문성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주요 ESG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여 ESG 통합 체계가 미흡하고 외부 위탁 운용을 주로 활용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 시에 ESG 요소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ESG 투자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SG 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사회적 기대를 만족하고 자체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ESG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

글로벌 보험회사는 빠르게 ESG 투자를 늘리고 있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는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보험회사는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 보험회사는 임팩트·지속가능 테마투자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 통합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알리안츠와 취리히는 선도적으로 ESG 통합 체계를 갖추어 이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 확보, 내부 전문성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주요 ESG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여 ESG 통합 체계가 미흡하고 외부 위탁 운용을 주로 활용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 시에 ESG 요소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ESG 관련 제도 및 정책 제정의 국제 흐름을 선도하며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 등에서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약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ESG 투자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ESG 통합 전략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를 평가하여야 하며, 내부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정책당국은 EU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하여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에서 개선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05

전망과 과제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보고서

연구 배경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 큰 폭(-3.8%)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3년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2년 5.6%, 2023년 3.9%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은 2023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를 가리키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산업은 이전까지 겪어 왔던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아닌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요 내용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인플레이션도 보험산업에 부정적이다. 2023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금융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의 실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 큰 폭(-3.8%)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3년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2년 5.6%, 2023년 3.9%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위험보험료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예년에 비해 성장세 둔화가 전망된다. 다만, 위험보험료 성장세는 수입(원수)보험료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 장기 추세로 제도 불확실성과 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과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0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국가재보험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상체계 중심으로 -
-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업법 체계와 구조 정비방안 연구 -
 -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
 - 연금충당부채 적정 할인을 산정방안 -

국가재보험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상체계 중심으로

조재린(선임연구위원)·김혜성(연구위원)·장동식(수석연구위원)·김연희(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국내 환경책임보험에서 초과 손해를 방식 및 손익분담 방식 국가재보험이 국가재보험자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국가재보험 구조 의사결정에서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지 탐색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보험자의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세부 운영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국내에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책임보험 의무화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했다. 국내 환경책임보험은 대형 환경사고에 따른 리스크 분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 제도를 채택했다. 환경책임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가재보험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연구 영역은 재보험 구조,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세부 운영역량 강화방안이다.

주요 내용

환경책임보험에서 재보험 구조별 국가재보험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요율산출방법론을 토대로 손해를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손익시물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국가재보험자의 평균손익은 초과손해를 방식에 비해 손익분담 방식에서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손익시물레이션 결과는 손익분담 방식이 국가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정책효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손익시물레이션 분석과 국내외 재보험구조 전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초과손해를 방식의 구조 개선과 손익분담 방식 전환 방안을 비교하고 각 안별 주요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국가재보험자 리스크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손익시물레이션을 바탕으로 최대손실과 목표적립액 설정 방안, 시나리오 기반 국가재정 고갈 리스크 분석 방안, 국가재보험자의 재보험 효과 시물레이션 방안 및 재보험안 선택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재보험자가 구제계정으로부터 국가재보험계정을 분리하고 손해사정 분야에서 역할을 강화하며, 손해를 산출 및 추정(UY 기준 손해율, IBNR 등)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익분담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국가재보험자는 배상책임 및 청구기준 증권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 정산방법 수립 등 운영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업법 체계와 구조 정비방안 연구

조영현(연구위원)·김동겸(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판매채널 규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판매채널 등장에 따른 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적 규정 중심 규제체제에서 원칙 중심의 사후규제체제로 전환하여 보다 유연한 채널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과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 한도 규제는 향후 K-ICS가 시행되면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닌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필요성, 그동안의 운영경험 반영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상 모집·판매규제 개편, 자산운용규제의 전환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입법례와의 비교분석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판매채널 규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판매채널 등장에 따른 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적 규정 중심 규제체제(Rule-Based Regulation)에서 원칙 중심의 사후규제체제로 전환하여 보다 유연한 채널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금액 또는 예외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 부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자 전문성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과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 한도 규제는 향후 K-ICS가 시행되면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닌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K-ICS에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집중리스크도 측정하여 요구자본에 반영하므로 한도가 폐지되더라도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트레이딩 목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산운용 규제가 사전·직접적 규제에서 사후·간접적 규제로 전환될 경우 자본적정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은행법과 유사하게 보험업법에 재무건전성 기준이 국제적 감독 기준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변혜원(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보고서

온라인채널 판매 관련 실태 점검과 금융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의 기대효과와 실제 효과 간의 격차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규모 등에 따라 가지는 기술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시 준수를 권장하는 일곱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배경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드러난 판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동 가이드라인 제정 시 설명의무 상시개선 협의체 구성 계획이 발표되었고 협의체는 첫 과업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을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 실태를 설명의무 이행순서 준수 여부, 설명서 제공 방식, 중요한 사항 표시 방식과 순서, 설명 방식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으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구매경험,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 방식, 금융상품 주요사항 설명 방식, 금융상품설명서 제공 방식, 금융소비자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설명의무 이행 실태와 설문조사 검토 결과,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의 기대효과와 실제 효과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설명서를 제공할 때 금융소비자의 개별적 특성과 비대면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을 구성하되, 소비자의 형식적 반응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설명수단과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했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성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이해 지원, 금융소비자의 이해 여부 확인과 관련된 일곱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연금충당부채 적정 할인율 산정방안

노건엽(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국가부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 추계하는 값으로서 할인율 등 가정 변경에 따른 민감도가 높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국의 회계기준서 및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국채 수익률이 없는 기간의 할인율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회계기준과의 일치성, 관찰값과의 적합성, 적용의 용이성, 충당부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한 부채(연금충당부채)는 국가지급의무가 있어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한다. 국가부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 추계하는 값으로서 할인율 등 가정 변경에 따른 민감도가 높다.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연금충당부채 산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할인율 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내용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무위험이자율로 국고채 수익률 또는 회사채 수익률을 주로 적용한다. 또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평가대상의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응되는 금융자산의 만기가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회계기준에서 특정한 기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국의 회계기준서 및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국채 수익률이 없는 기간의 할인율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보험산업은 2023년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K-ICS)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방식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고채 수익률이 관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할인율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현행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만기 할인율 변경, 보고기간 말 할인율 적용, 사회적 할인율 적용 등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대안 중 회계기준과의 일치성, 관찰값과의 적합성, 적용의 용이성, 충당부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산정방안 중 만기 20년 이후 추정방안 위주로 연구를 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Chapter 07

금융·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제2022-1~6호) | CEO Brief(제2022-1~21호) -
KIRI 리포트(제537~562호) -
KIRI 보험법리뷰(제15~20호) -
KIRI 영상자료(2022. 1~12) -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2-1호

최근 GA채널을 중심으로 한 보험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보험회사의 전속채널 분리 유인 확대, 수수료체계 개편 등이 GA시장 구조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과 플랫폼기업의 진출 등으로 GA시장의 주도권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인바운드 사업모형에 대한 시도와 함께 기업공개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제판분리 현상과 GA의 대형화·집중화 추세가 이어지며, 모집시장은 단순·저가 상품 판매와 전문화된 자문서비스 시장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자사 상품 및 고객군, 전속 영업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채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보험시장 성장과 과제

안철경 원장

CEO Brief 제2022-1호

2022년 보험시장의 성장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조정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보험시장 등 신성장 영역 개척을 위한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에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해 보이고, 모집시장정책은 플랫폼의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GA 실질에 맞는 영업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유연한 금융규제체제로 전환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CEO Report 제2022-2호 | CEO Brief 제2022-10호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7~2.8%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2022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일반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되며,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이 전망된다.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윤성훈(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2호

①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Claim 인플레이션과 CPI 인플레이션 간의 차이로 인해 CPI 인플레이션 위험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예상치 못한 CPI·Claim 인플레이션 확대는 손실보상이 실손비례이고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②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계약가치 축소로 보험 수요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금리 동반 상승으로 이러한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 ③ CPI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있어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방향

강성호(선임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2-3호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고, 기초연금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연금체계를 재구성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험모집시장 진단과 과제

김동겸(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3호

보험시장에서는 수수료 중심 영업관행과 미흡한 고객유지·관리 서비스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 중심의 모집시장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집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김세중(연구위원)·강성호(선임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2-4호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형, DB형)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시장은 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근로 활동기의 노후자산 적립 수요 대응과 은퇴 이후 종신연금 수령 수요 대응으로 매칭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세부 시장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하면서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강성호(선임연구위원)·정성희(선임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4호

황인창(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

새 정부의 출범은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에 대한 이슈 제기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빅테크의 보험업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I): 건강보장 정책 방향

김경선(연구위원)·정성희(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2-5호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로 재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 개편 및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손해율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이 위축되고 보험의 가용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은 규제에 의해 대규모 요양시설 및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요양시설 초기투자 부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황현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5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① 탈인간중심, ② 탈탄소·친환경, ③ 다양화·세분화, ④ 플랫폼·데이터로 요약된다.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인간 중심 및 내연기관 중심의 제도 및 약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운영 체계를 신종 이동 수단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플랫폼 이용자에게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2-6호 | CEO Brief 제2022-15호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이번 설문에는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율은 90%이다.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황인창(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6호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① 풍부한 시장 유동성, ②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③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이 낮고 규제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가상자산과 실물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됨에 따라 금융안정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과정 중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플랫폼 정책에 대한 논의

황인창(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7호

금융플랫폼은 금융의 다양성·효율성·포용성을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장경쟁·안정성·소비자 보호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금융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 행위 방지, 공정경쟁 마련,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GA시장 변화와 전망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8호

GA채널이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채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험회사의 전속채널 분리유인 확대와 모집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GA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GA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GA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GA를 중심으로는 인바운드영업 등 새로운 사업모형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났다. 향후 제판분리 현상 및 GA의 대형화·집중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상품 및 고객군, 전속모집 조직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채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대내외 거시변수 영향 및 전망

윤성훈(선임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9호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대부분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도 2022년 들어 이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대내외 거시변수 모두가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그 당시와는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금리 상승과 경기 하락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손재희(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1호

MZ세대의 보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디지털 보험 및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디지털 보험회사는 기존 인슈어테크와 달리 보험 인가를 받아 직접 디지털 보험을 개발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시장 환경, 회사 역량 등에 따라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는 초기에는 단순한 상품 제공 사업모델로 시작하되, 독자적인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모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김세중(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2호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연금시장을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그리고 퇴직연금의 3개 연금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각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황현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3호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측면에서 보험의 역할 확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으로, 약관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정책 방향

정성희(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4호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비급여의 통제관리 미흡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공급이 위축되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의 채널을 통해 과잉공급되는 비급여를 집중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관리기전 구축을 제안한다.

2023년 보험산업 과제

김해식(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6호

2023년 보험산업은 경기·제도·수요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환경에서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면서 건실한 자본 관리와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통하여 보험공급과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 추세적으로는 IFRS와 친환경·친사회(ESG)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구성 변화가 보험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IFRS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영의 시계(Time horizon)를 장기에 맞추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사업모형에 내재화하는 데에 보험산업이 주력해야 할 것이다.

환율의 쏠림 가능성 및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7호

원/달러 환율은 금년 9월 22일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외환 당국은 과도한 쏠림 가능성을 우려한다.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의 쏠림 가능성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이 장기흐름 수준으로 돌아오는 회복력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환율의 쏠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보험산업 과제

황현아(연구위원)·김혜성(연구위원)·정성희(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8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카카오의 서비스 중단 사태는 부가통신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례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가 배상책임을 부담할지는 사고 원인 및 카카오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피해를 확정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은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등의 위험관리 컨설팅 및 전용 상품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생명보험의 현황 및 과제

김규동(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19호

신용생명보험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으로, ‘빛의 대물림’ 문제 해결에 유용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규모는 매우 작는데, 이는 대출 소비자에 대한 보험 가입 권유가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생명보험은 소비자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 보험회사의 ESG 경영, 가계대출관리 및 금융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 규제 완화와 상품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김경선(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20호

가격 규제는 시장이 독점·정보비대칭 등에 의한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나, 규제의 부작용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작동 가능한 경쟁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개입 여지가 많지 않다. 미국에서는 보험가격이 위험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가격 사전승인제와 건전성 규제로 가격을 규제해왔으나, 점차 가격 요율은 자율화하면서 공정성 강조의 방향으로 규제의 흐름이 변화했다. 그러나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장기보험이고 전환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장과 보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미국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백영화(연구위원)

CEO Brief 제2022-21호

즉시연금보험 관련 항소심에서 최근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연금월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이 이행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소송에서 1심 및 2심 법원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계속하여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세대별 보험상품 가입 변화와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7호

최근 10년 동안 고령층의 보험가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년층(30·40대)의 신규 유입은 감소하고 있다. 세대별 보험가입률은 보험상품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건강 보장 수요는 확대되었으나 사망이나 노후소득 보장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 변화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가입연령 확대, 신상품 출시, 상품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흡수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방향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9호

미국 유선통신산업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향후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사후(Ex post) 영업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이제는 사전(Ex ante) 전문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전문규제로는 데이터 공유제 등이 현재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인구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9호

자연노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요인’과 인구 순이동 등 ‘인구이동 요인’이 지역별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았다. 인구 유입지역인 경기, 충남, 제주 등에서는 ‘인구이동 요인’이 고령화를 둔화시킨 반면, 인구 유출지역인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인구이동 요인’이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서울은 인구 유출지역이면서도 ‘인구이동 요인’이 고령화를 둔화시켰는데 이는 인구 유입이 2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인구이동이 수도권의 고령화는 늦추고 비수도권의 고령화는 촉진시키는 등 양극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한상용(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0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직면한 각종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 언더라이팅 강화 등이 이루어져 왔다.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관련 리스크 분석과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 일부 보조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김경선(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0호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저조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률, 동물병원 가격정보 부족, 진료비 표준화 미비 등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슈어테크 기반의 반려동물 식별기술(비문인식)과 동물병원 가격비교 플랫폼 및 리워드형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앱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 기업과 제휴하거나 기술을 내재화하는 등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 주요국 경제 회복의 특징 비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1호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20개국에서 2021년 GDP가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에서 2021년 민간소비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정부부채 증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았으나 정부부채는 더 증가한 국가가 많은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국가가 더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재정 여력보다는 물가 불안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활동 행태와 시사점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1호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의 신용활동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카드, 신용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해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계약 해지 전 은행·신용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를 늘린 소비자가 많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추이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2호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조정과 더 내고 덜받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혁에 따라 중산층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 증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이 사적연금을 적립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에 중산층 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중산층의 공적연금 감소분(혹은 부담분)을 사적연금에 대한 납입유인 제공을 통해 보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2호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확대와 경기둔화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자동차보험 보험금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자동차보험금 증가율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대물 및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 과잉진료 증가와 보험료 조정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강성호(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3호

국민연금은 구조적 문제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1차 개혁), 2007년(2차 개혁)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15년 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이에 2022년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단순히 답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협력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은 보험료 상향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최근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 변화의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3호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과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호도 분석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4호

2017~2021년 기간 동안 자산적립성 보험에 대한 가계의 수요 및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보험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2021년 60%로, 2017년 이후 9.4%p 감소하였고, 적립 및 예치식 저축에서 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31.7%로, 2017년 이후 8%p 감소하였다. 특히, 소득3~5분위, 임금근로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40세 미만 가구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코로나 유행 이후 40세 미만 가구의 자산적립성 보험시장 이탈과 보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자본시장 참여가 늘어남만큼, 향후 이들 집단의 자산구성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내 등록외국인 보험가입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박희우(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4호

국내 등록외국인의 비중은 전체인구 대비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이들의 특성 및 보험가입 행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등록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는 젊은 층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채널 위주의 판매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장기적으로 등록외국인의 지역적인 분포 및 체류목적도 다양화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민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외국인 대상 보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보장공백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5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의 원격의료 지원 정책, ICT 및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이용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경험한 의료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상용(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이연지(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5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며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부과하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항공기 억류와 같은 직접 손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에 따른 2차 파급 효과 등을 통해 전 세계 보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 전쟁은 전 세계 보험시장 위험보장 및 재무 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IFRS17 도입과 생명보험 성장성 지표

김세중(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6호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보험영업수익 인식 방법이 변화하면서 현재 수입보험료로 대표되는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 지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IFRS17 도입 이후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보험료의 경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성장성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부각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단순한 외형 확대보다는 손해를 및 유지를 예측을 정교화 함으로써 충분한 보험계약 마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7호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계약이전제도의 경우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포괄이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7호

정부부채 비율 85%(GDP 대비) 이하 국가들의 경우 정부부채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의 상관계수는 0.46인데 반해, 85% 초과 국가들의 경우 상관계수가 0.72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채 비율 85% 이하 국가들의 경우 정부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계수가 0.32이며, 85% 초과 국가들의 경우 상관계수는 0.27로 계산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지 않을 경우 재정정책은 소비자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기 시작하면 재정정책이 소비자물가를 희생시키지 않고 경기를 부양시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인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8호

1인 가구는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가 연령별로 크게 차이하고 있어, 1인 가구를 동질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볼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는 식료품과 외식비의 경우 주로 30·40대에서, 교육비는 40·50대에서, 주거비는 전 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보험료 지출 비중은 40대와 50대에서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는 40·50대 중년기에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적극 활용하지만, 30대 이하에서는 2인 이상 가구보다 보험의 활용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및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9호

2006년 1월~2022년 4월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거시변수는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세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만으로 살펴보면 높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5% 이상이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이며, 환율이 2022년 들어 이에 가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기와 같이 이례적으로 2022년 들어 대내외 거시변수 모두가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탈석탄 현황과 과제

이승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4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각국이 채택하는 석탄 관련 산업 감축 및 폐지 정책은 위험인수 및 자산운용을 통해 이들 산업과 연계된 보험산업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의 탈석탄 움직임은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탈석탄은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석탄발전을 포함한 모든 석탄 관련 산업을 포괄하여 인수 및 투자의 배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보험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 및 손해 보험회사가 탈석탄을 선언하였고 보험인수 및 자산운용에서 탈석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0호

국내 실손의료보험보다 앞서서 구조적 적자 문제와 시장 철수를 경험했던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상품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손의료보험 사업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0호

자동차 사이드 미러끼리 스친 접촉사고에서 상대(피해)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한 사례는 상해 심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초래하는 자동차보험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뇌진탕 환자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뇌진탕 환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8배이다. 뇌진탕과 같이 피해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손해배상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변동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조영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1호

최근 수요회복,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큰 폭의 정책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및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장기 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자역마진이 큰 회사의 경우 장기 금리 상승 시마다 교체 매매로 장기 국채 비중을 확대하여 이자역마진 규모를 줄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이익·자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나, 보험회사는 불확실성 속의 기회 요인을 이용하여 지급여력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경험 조사결과와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호

실손보험금 청구 경험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보험금 청구·지급 경험이 소비자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신청 중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보험회사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 확인을 돕고 보험판매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인 것으로 조사되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불편이나 불만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호

2015년 이후 1인당 GDP 순위의 경우 한국, 일본, 싱가폴은 횡보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순위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 싱가폴은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있으며 대만은 상승세, 일본, 홍콩,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순위가 모두 상승한 국가는 대만이며, 모두 횡보한 국가는 한국, 싱가폴 그리고 모두 하락한 국가는 이탈리아, 홍콩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의 하락세를 보면서 스스로 상승세인 것과 같은 착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설계사 소득하락 원인과 평가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호

지난 2년(19~21년) 동안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월 평균 소득은 연평균 -2.0%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월 평균 소득은 연평균 -7.6% 하락하였다. 설계사 1인당 평균소득은 판매인력 수, 매출액(수입보험료), 모집수수료로 구성되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설계사들의 생산성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설계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사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집중시키거나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사의 소득저하로 인한 영업조직 이탈이 보험회사의 영업통제력 약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베디드 보험 사업모델의 이해

손재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3호

임베디드 보험이란 비보험 상품·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보험상품·서비스가 내재되어 비보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을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증가,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및 플랫폼을 통한 소비의 확대, 그리고 기술의 진전으로 임베디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임베디드 보험 및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험소비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의 증가를 예상할 때 임베디드 보험의 잠재력은 클 수 있으며, 이에 다양한 임베디드 보험시장 참여 방식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 차이 및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4호

2011년 1월~2022년 7월 기간에 걸쳐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에 대한 개별 소비자물가의 기여도는 대부분 농·축산물,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에서 발생하며, 집세는 기간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별 소비자물가의 기여도는 농축산물이 낮고, 집세와 개인서비스가 높으며, 코로나19 이후 들어 공업제품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개별 소비자물가의 가중치가 선형회귀식에서 추정된 계수값과 특히 집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집세의 가중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생명보험회사 신계약가치 추이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4호

상장 생명보험회사들의 내재가치(EV) 항목 가운데 신계약가치(VNB)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계약가치가 높은 상품의 비중 확대가 주요한 요인이다. 보험회사는 IFRS17 도입 후 보험계약마진(CSM) 성장을 위하여 신계약가치 확대 전략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변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계리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품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공급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종신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윤진(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5호

2015년과 2019년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증가는 종신연금의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혼합하거나 저축기능을 혼합함으로써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 니즈 변화를 종신보험으로 통합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리변동과 저축보험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5호

저축보험은 시중금리 변동으로 정기예금 금리와 금리차가 커지는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 주도로 판매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보험영업 수익성 측면에서 위험보험료 성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나,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축보험료 확대를 통한 자산규모의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보험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저축보험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이익률 향상이 필요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축보험 만기 적립금 채유치를 위한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이 필요하다.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빈도 분석

전용식(선임연구위원)·강윤지(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6호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관련성이 높아지며 관련 기사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정 주제에 대한 언론보도 빈도가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언론기사에 나타난 과잉진료 연관단어들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한방, 보험사기 등 한방진료와 비급여와의 연관성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한방진료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상위 연관단어였으며, 한약, 침약, 약침도 주요 연관단어로 나타났다.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가운데 보험사기 빈도가 2016년부터 높아지며 부정적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율의 쏠림 가능성과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7호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환율의 쏠림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환율은 쏠림 가능성이 높으며, 쏠림 정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2009년) 시기보다 작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2014~2015년) 시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이 장기 흐름 수준으로 돌아오려는 회복력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환율의 쏠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전속설계사의 분포와 시사점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58호

전속설계사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지방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활동범위는 서울과 지방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지방 설계사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동의 편리성이 시장규모보다 설계사의 영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의 설계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전속설계사 채널 축소로 상품 선택권이 제한받는 보험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채널 활성화 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기존 조직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등이 요구된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리적 특성에 따른 보험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유가로 바라본 소비자물가 전망과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60호

국제유가가 2023년 들어 소폭 하락에 그치더라도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할 결과, 국제유가만을 고려할 때,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진입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5월, 미국 8월이며, 2%대로 하락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10월, 미국 2024년 1월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준은 한국은행보다 기준금리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야 하고 경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희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은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해 운전자 나이와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60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이 가해 운전자의 나이,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2016년 사고 가운데 민원 접수 사고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민원 없는 사고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인배상 변동성이 민원의 원인일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민원 접수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 치료비와 합의금, 가·피해자의 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 운전자의 인구·사회적 특징이 피해자의 진료 행태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상해 심도에 따라 보상이 객관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보험 산업 및 인슈어테크 트렌드: ITC Vegas 2022를 중심으로

손재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60호

InsureTech Connect는 인슈어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보험시장 참여자가 함께 모여 보험 이슈에 대해 소통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 행사로 이를 통해 글로벌 보험산업의 변화와 트렌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금번 2022년 행사를 통해 나타난 글로벌 보험산업의 주요 트렌드는 첫째, 데이터 및 기술 활용 확대를 넘어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전환, 둘째,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 및 기술의 활용 확대, 셋째, 임베디드 보험에 대한 관심 증대와 사이버 기후 리스크 심화에 대한 대비의 강조, 그리고 생태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적극적인 파트너십 전략의 중요성 대두이다.

합계출산율의 개념으로 본 혼인 및 출산 문제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61호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을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로 살아갈 경우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령별 인구 수와 관계없이 연령별 출산율의 단순 합산으로 산출된다. 본고는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여성이 한 번이라도 출산을 할 확률과 남녀가 각각 평생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할 확률을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평생 한 번이라도 출산을 할 확률은 2021년 0.46으로 나타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혼인을 할 확률도 2021년 남성 0.54, 여성 0.48로 나타나 혼인·출산 모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62호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로 적립금이 누수되고 연금수령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연금형태의 수령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중과세 혹은 패널티 부과, 연금수령의 (준)강제화, 다양한 연금지급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이직 후 해지되지 않도록 하고, 지급 시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하며, 지급 방식 다양화와 투자상품에 연금상품을 편입하고, 무엇보다 가입·유지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적립금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손해보험회사 상품구성 변화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7호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손해보험(장기, 자동차, 일반) 상품구성은 장기보험 비중이 4.8%p 증가하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이 각각 3.8%p, 1.0%p 감소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비중은 보험수요와 경쟁전략 등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성보험 수요 증가는 손해보험산업 상품비중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영향

정원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7호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도입되었다. 대다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평가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를 고려한 영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전쟁면책 적용 논쟁

송윤아(연구위원), 조용운(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7호

세계 보험업계에서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쟁면책 적용 논쟁이 한창이다. 전쟁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사이버공격의 주체와 성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사이버사고의 면책조항과 부보범위를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 연루 사이버공격에 대한 세계 보험업계의 전쟁면책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①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8호

보험산업은 CPI 인플레이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 인플레이션 확대는 손해보험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 CPI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기에 보험산업은 다양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② 소비자 기대 변화와 디지털 전환

황인창(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8호

2022년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① 질병·간병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 증가와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성향 지속이 예상되나, ② 실제 보험소비행태의 세대 간 차이는 심화가 예상된다. 한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이슈로 ①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②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 ③ 제판분리 가속화에 따른 회사별 경쟁전략 차별화가 예상된다.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③ 상품수요 및 보험유통시장 변화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8호

시장환경 변화로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플레이션 압력,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및 사회 환경 변화는 보험수요 및 상품 선택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계부채 및 소득여건 악화로 보험회사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계약관리 및 디지털 전환, 플랫폼기업의 보험업 진출성과 등에 따라 보험유통시장의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④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과 보험산업 가치 제고

조영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8호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보험회계(IFRS17, K-ICS)는 기존에 보여주지 못한 실질적 성과와 리스크를 드러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단기 매출 확대가 아닌 가치중심경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치에 관한 유용한 정보의 공시 제도 강화와 보험회사의 사업조정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여, 시장규율이 확립되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가치가 제고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⑤ 자산운용 환경 변화와 고려사항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8호

글로벌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으로 2022년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의 확대가 예상된다. IFRS17과 K-ICS 도입 전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이동제한 완화 시 해외대체투자 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하지만 환헤지 비용과 자산가치 변동성 확대를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ESG 및 탄소중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KIRI 리포트

K-ICS 경과조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1호

경과조치,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이 포함된 K-ICS 최종안이 2021년 말에 제시된다. 경과조치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가용자본, 요구자본, 보고 및 공시 등의 방안이 폭넓게 제시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공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

IPMI(International Private Medical Insurance) 시장 현황

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1호

IPMI는 해외 근무자 등이 타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IPMI는 여행보험 및 현지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장기간 더 종합적인 범위의 보장을 거주 지역의 제한 없이 제공한다. 글로벌 보험그룹은 코로나19로 부상한 건강 관련 니즈를 IPMI에 반영하며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리 보험산업 내에서도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와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2호

2022년 새 정부의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변화는 보험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보험산업은 공적연금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대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의 사회적 합의 도출, 자동차보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및 보상,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와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동참 등을 통해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 결과와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2호

제3차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는 최근 보험사기 추이, 보험사기 대응 현황, 데이터 분석 기술의 보험사기 적용과 관련된 규제 시사점, 의료사기 방지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원격의료와 코로나19 검사 사기 적발에 기관 간의 협조, 데이터 공유, 데이터분석 기술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데이터분석 기술 활용 윤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 전 구성원의 데이터 이해력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디지털 혁신의 딜레마: 금융 vs. 비금융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3호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승자 독식의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면서도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금융 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시장구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디지털 혁신으로 금융 포용성이 증가하고 사회후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금융 부문에서는 소비자 위험 수준에 따른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시장구조하에서 사회후생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국채선물과 보험회사 금리위험 관리

노건엽(연구위원)·진옥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4호

2023년 시행되는 K-ICS에서 보험회사는 채권선물을 활용하여 금리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기 30년 국채선물이 도입되면,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금리위험 관리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라 초장기 국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의 완화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보험업법상 한도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는 파생거래에 따른 내부통제 프로세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황현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4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① 탈인간중심, ② 탈탄소·친환경, ③ 다양화·세분화, ④ 플랫폼·데이터로 요약된다.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인간 및 내연기관 중심의 제도 및 약관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상 및 운영 체계를 신중 이동 수단에 확대하여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이용자에게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데이터 접근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오픈뱅킹시스템의 성장과 시사점

손재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5호

'19년 출범한 오픈뱅킹시스템은 금융시장 내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심이 높다. 오픈뱅킹시스템 참여로 보험산업은 이를 오픈 인슈어런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보험고객의 정보공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우려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참여사의 금융 데이터 교환 및 조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향후 성장의 기회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정성희(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6호

2021년 여행보험시장은 일상속의 여행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여행보험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① 일상에서 여가활동 중심, ② 유연·편리함 추구로 전환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활력을 위해서는 여행보험상품에 일상과 연계된 ‘생활여행’을 위한 여가·레저 보장을 확대하고, 여행의 유연·편리함을 위한 여행 취소·중단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거시금융환경 변화와 생명보험 해지율

전용식(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6호

코로나19 이후 실질금리 등 거시금융변수들과 생명보험 해지율 사이 정의 선형관계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6월부터 '22년 2월까지 상관관계수 추정 결과, 실질금리와 실업률이 과거 3년 평균 수준 대비 높아질수록 생명보험 일반계정 해지율은 추세에 비해 확대되는 경향이 통계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등은 생명보험 해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계약 감소가 확대된다면 생명보험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객경험에 주목한 체험형 비즈니스모델의 확산

손재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6호

ICT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에게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비즈니스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부상과 함께 체험형 비즈니스의 수요 증가는 독자적 온라인 플랫폼 기반인 D2C(Direct to Consumer) 모델과 체험형 오프라인점포 운영의 확대로 나타난다. 보험업도 MZ세대에게 보험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사업모델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의 IRP 이관 의미와 한계

강성호(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8호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IRP계좌로 이관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의 연금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도 IRP계좌로 이관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고 근로자의 이직도 잦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이관 퇴직금은 정년시점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자금 필요시 관련 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IRP 및 개인연금 경쟁도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김유미(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49호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오던 보험업권은 개인형 IRP의 개인연금 시장 대체, 소비자들의 투자형 상품 선호 확대로 노후소득보장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경쟁력이 있는 보험업권의 경쟁력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보험업권은 금융시장 환경 변화, 소비자 저축·투자 태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상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 증가와 국내외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김세중(연구위원)·김윤진(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0호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전 세계에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공격 증가세이나,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인한 보험사 손해를 상승 및 재보험사 사이버 위험 인수역량의 한계로 인해 보험연계증권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인수능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산업의 부동산 PF 대출

전용식(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2호

최근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은행권보다 커지면서 보험산업의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보다 경기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더 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과 국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하락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PF 위험의 크기는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위험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및 영향

황현아(연구위원)·정성희(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2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손보험금 상당의 진료비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판결 선고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정원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3호

정부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 시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수령기에 연금수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금소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에 변화가 없는 반면,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위험과 보험산업 대응

박희우(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3호

최근 ESG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그린워싱 등 사회적 책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보험료 책정 등의 과정에서 그린워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그린워싱 위험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제적 정책 동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보험대리점 업무품질 평가제도 도입과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4호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업무품질 향상과 고객중심 운영을 목적으로 공통기준을 통해 보험대리점을 평가·인증하는 ‘보험대리점 업무품질 평가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로 소비자는 보험대리점 선택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관리 등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내 보험산업도 GA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판매자 신뢰도는 낮은 수준으로, 해당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및 의료이용량 변화와 손해보험 수익성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4호

자동차 운행량과 의료이용량은 '20년~'21년 코로나19 유행기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둔화 후 과거 추세로 회귀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자동차 운행량 둔화 효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의료이용량 둔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의료이용 중 사적보험 보장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이연소비 또는 이연공급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5호

2022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 완화 방안이 2022년 6월 말부터 적용되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RBC 비율은 전년 말 수준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K-ICS 비율의 금리민감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 대비 방안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5호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 향후에는 자연재해도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대비가 필요한 주요 위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위험관리자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경우에는 홍수재해 대비에 있어서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준형 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오병국(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6호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률이 낮고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혼율 왜곡 현상에 대한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6호

코로나19 이후 이혼 건수 및 이혼율은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볼 경우 젊은 계층에서는 이혼율의 하락세가, 고령층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며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유배우자 기준으로 이혼율을 산출한다면 젊은 계층의 이혼율은 하락하고, 중년 이후의 이혼율은 상승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이혼율의 상대적인 크기는 젊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가 산출된다.

식량안보와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의 활용

장윤미(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6호

최근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돕고 국내 생산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국내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도울 수 있다. 해외 보험회사는 농업 관련한 다양한 지수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국내 보험회사도 농업 분야에서 지수형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사적연금의 관계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7호

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도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 소득을 포함할 경우 이중부과, 일시금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연금 수령 시에 부과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

이정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7호

최근 금융업 및 보험업에 진출한 빅테크의 성패 여부에 대한 예측과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여 규제 관련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보험업에서 빅테크의 성패 여부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해외에서는 빅테크의 새로운 시장진출에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입은 소비자효용은 물론 시장경쟁까지 다각도에서 지켜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과 탄소배출 Scope 3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8호

최근 보험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보험업계는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지만, Scope 3 공시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단계적 도입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인수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공시기준 제정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선제적으로 Scope 3 공시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는 단계적인 공시기준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전후 소비 선호도 변화와 보험 지출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8호

'22년 2/4분기와 코로나19 이전인 '19년 2/4분기 사이에 실질소득과 실질소비가 근로자 가구의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는 유사함에도 세부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구입 및 의료 관련 실질지출은 증가하고 보험 등은 감소하였다. 특히, 보험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에서도 실질지출 감소로 나타난 데다 '22년에는 그 감소세가 더 빨라지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9호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금상품의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의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향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제3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59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취급하는 상해, 건강,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20년 전체 보험산업 내 비중은 25.1%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제3보험은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리스크 단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구조 변경 등 질적 차별화 시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향후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보험금 지급심사 중 소비자 불만족 경감방안

변혜원(연구위원)·송윤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60호

최근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강화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불만 경감방안을 찾고자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전달하는 정보가 추가심사에 대한 소비자의 수궁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가 보험금 지급 및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불만 경감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저축보험 해지 관심도 증가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60호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해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금리 상승과 보험회사의 자산 증가 정체가 지속되는 경우 예·적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차이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저축보험의 해지는 지속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계약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계약유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백영화(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61호

최근 즉시연금보험 관련 항소심에서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해당 보험약관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소송들의 추이도 계속하여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인플레이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용식(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62호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높아지고 있다. 차량 수리비는 공임, 도장비, 부품비로 구분되는데 부품비와는 다르게, 공임과 도장비에는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특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증가세 확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I)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5호

① [2020다291449] 보험자는 이륜차 계속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 및 위반 시 효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과거 이륜차 부담보 특약 체결 경험이라고 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2016다203933] 정비업자가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수리를 하였더라도 고의로 지연수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회사는 정비업자에게 추가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2018다279217] 후유장해의 일종인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해'에 해당하는 요소가 포함되도록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규제 관련 판례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5호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되는 자산거래의 범위에 전산용역거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바, 이 판결은 (i) 금지되는 대주주 거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열거된 거래 유형의 개념적 표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ii) 정상가격의 의미를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의 거래에서 형성되었을 가격'이라 규명하고, 정상가격의 합리적 산출에 관한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IFRS17 도입 관련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개정 사전예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5호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예고되었다. 책임준비금 구성, 포트폴리오 구분, 회계모형 적용 기준과 미래현금흐름, 보험계약마진, 할인율, 위험조정 등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재무제표 용어 및 부채와 자본 항목이 변경되고 생·손보 간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발생주의 계정과목 신설, 특별계정 표시 및 사업비 회계처리 등도 변경되었다. 보험감독회계가 원칙 중심으로 변경되어 보험회사는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부채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6호

- ①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② 보험사기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보험금이 환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보험금 환수권 및 이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및 게시물 삭제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④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보험금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보험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정하고 명문의 환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DLF 불완전판매 관련 판례 검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6호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판매 은행 두 곳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의 1심에서 2021년과 2022년 각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해 2021년 판결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2022년은 입법취지를 보다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사항은 일률적으로 정형화할 수 없으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의 한계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바,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의 결론 및 향후 논의 전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7호

2022년 4월 대법원은 최초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총 6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다. 명칭·계약의 형식이 거의 동일함에도 2건은 근로자성 인정, 4건은 부정으로 결론이 다른데, 이는 회사별로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랐기 때문으로 법원은 (i) 지점장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회사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고, (ii) 근로자 신분의 지점장과 업무형태가 유사하며, (iii) 직·간접적으로 근로관리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KIRI 보험법리뷰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8호

2022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시행을 1년 앞두고 그간의 경험과 논의를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등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개정안은 ① 선불·직불 지급수단에 연계·제휴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고, ② 외화보험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며, ③ 투자성 상품 불초청 권유 시 소비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한다. 그 밖에 휴대폰·신용카드 인증을 포함해 다양한 소비자 확인 방식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도 담고 있다.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9호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와 사고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기차 고유의 특성이라기보다 신차 및 첨단차로서의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되며, 배터리 손상 시 보상범위,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9호

2022년 8월 금융위원회는 헬스케어 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i) 보험회사가 수행 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ii)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며, (iii) 기업/개인 대상 건강상담·실천 관련 서비스, 헬스케어 물품의 판매·중개 등 가능 업무를 예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본진 방침으로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헬스케어 외에 모든 신고 대상 업무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IRI 보험법리뷰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5호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보험 관련 특례가 인정된 서비스는 27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여행·레저보험의 간편가입 서비스, AI를 활용한 TM 모집 서비스,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내장 수술의 입원치료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6호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대하여 그 실질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았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에서도 실제로 수술 이후 의료진의 구체적인 처치 등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입원치료의 의미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해당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7호

보험사기는 형사·민사·행정 분야에 걸친 복합적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다른 금융사기와는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특성(복합성·다양성·지능화·조직화)을 고려할 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AIC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의 개정 내용과 특별이익 규제에의 시사점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7호

미국 NAIC는 2021년에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증진, 손실의 완화·관리, 위험의 모니터링·평가 등을 위해 설계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리베이트로서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KIRI 보험법리뷰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8호

보험계약의 해지 단계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해지 시의 유의 사항(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될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비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는 내용, 신규 보험계약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이나 신규 면책기간 적용 등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과 특별이익 규제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8호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험 민원대행과 변호사법 위반 문제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9호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료 반환, 해지환급금 청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 등이 보험료 반환, 보험금 청구 등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20호

최근 1년간 총 14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그 중 13건이 소관위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 중 보험업과 관련된 내용은 총 1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보험의 허용, 금융분쟁조정지 편면적 구속력 부여, 고령금융소비자 개념 도입 및 설명의무 강화, 금융피해 방지조치 등 보호 강화, 보장성상품 중도해지 시 설명의무 부과 등이 있다.

2022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20호

2022년에 총 7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들은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폐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 개선,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도입,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유형 추가,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추가,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황인창(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1.3



향후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 제고, 스마트계약 관련 법률문제 해소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손재희(연구위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일: 2022.2.17



MZ세대는 디지털에 기반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래 주력 보험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파악 및 보험소비 경험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김경선(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3.1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상황 증가는 반려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 기업과 제휴 또는 기술의 내재화 등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한상용(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3.22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일: 2022.4.14



2021년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 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율주행차와 보험

황현아(연구위원) | 영상 Report

유튜브 업로드일: 2022.4.20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1부)

한상용(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5.13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유가증권시장, 에너지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보험산업은 탈 러시아를 감행하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 보험산업의 대응과 이번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피해규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2부)

한상용(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5.1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보험의 현황과 특징

이소양(연구원) | 영상 Report

유튜브 업로드일: 2022.6.26



중국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까지 무려 50개에 달하는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1) - 노인으로 잘 살아가려면?

강성호(선임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8.4



노후 빈곤 문제는 개인의 노후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0세 이후 중년세대를 위한 금융상품 등의 노후준비 가능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후설계 상담을 통해 다가올 고령화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변동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조영현(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진옥희(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8.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하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회복되어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CEO Report

유튜브 업로드일: 2022.9.1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GA시장 진출 확대, GA의 대형화 및 집중화, 기업공개(IPO)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GA 채널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GA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인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9.7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특징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연령별로 소비 지출의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1인가구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

김규동(연구위원) | 영상 Report

유튜브 업로드일: 2022.9.15



최근 10년간 주택가격 상승은 중산층의 자산가치 상승을 견인하였고, 이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은 종신보험 가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중산층도 미리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 재원 마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2) - 노후자금 계산: 전문가 VS 개인

강성호(선임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9.28



공·사적연금 수준은 평균소득자(월 3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년 납부 시 1%p씩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며, 퇴직 및 개인연금은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국민연금의 절반인 연간 0.4~0.5%p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양승현(연구위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일: 2022.10.14



몇 차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같은 외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합리화에 관해 넓은 관점에서 개선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박희우(연구위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일: 2022.10.27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CEO Report

유튜브 업로드일: 2022.11.3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3) - 연금으로 살아가기

강성호(선임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11.9



부양의식 변화, 자산구조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거나,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성공적인 노후설계를 위해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의 축적과 연금화를 통해 노후필수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제3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12.14



최근 제3보험은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리스크 단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구조 변경 등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향후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IRP 알아보기!

강성호(선임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일: 2022.12.16



연말이 다가오면서 IRP 등 연금세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연금세제를 개편하였다. 본 영상에서는 IRP, 연금저축을 활용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준형 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오병국(연구위원) | 영상 Report

유튜브 업로드일: 2022.12.23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온라인홍보 서포터즈

1. 목적

우리원에서는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채널(Owned Media)을 통해 온라인 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우리원에 대한 더욱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는 원외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정보(Earned Medi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부터 새로이 온라인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실시하였다.

2. 모집 및 운영 계획

보험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모집하고자 보험·금융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홍보하였으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 제작 부문과 온라인 홍보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하였다. 또한 활동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을 공지하여 지원·활동의 동기를 촉진하였고, 홍보물 작성 과정에서부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양질의 콘텐츠 양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서포터즈 선발 및 발대식

서포터즈 선발은 지원서류를 바탕으로 서포터즈 심사위원단의 심사위원이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결과물로 정량평가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영상 제작 부문 2명(팀), 온라인 홍보 부문 4명(팀)을 각각 선발하였으며, 발대식을 통하여 서포터즈로 공식 임명하였다.



4. 활동 및 결과

발대식을 시작으로 9주간(7/6(수)~9/5(월)) 활동하였으며, 영상 제작 부문은 해당기간 안에 3분 이상의 영상 1건 이상, 온라인 홍보 부문은 매주 본인의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카드뉴스 2건 이상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활동기간 중 각 부문별 제작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해당기간까지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서포터즈의 의견과 우리원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활동 종료 시점에 영상 제작 부문에서는 보험 관련 및 연구원 기관소개에 관한 5분 이상의 영상 총 3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부문에서는 총 75건의 연구원 보고서와 관련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는데, 이는 우리원 홍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5. 해단식 및 시상

해단식을 통하여 서포터즈 활동의 종료를 안내하였으며, 심사위원단의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및 참가상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III

2022년 대외활동

- Chapter 01 대외세미나
- Chapter 02 산학세미나
- Chapter 03 포럼
-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Chapter 01

대외세미나

- 금융플랫폼 정책, 바람직한 방향은? -
-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
- 임베디드 금융과 보험 -
-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 데이터경제와 지속가능보험 -
- 보험산업 디지털혁신의 비전과 추진전략 -
-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방안 -
-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

금융플랫폼 정책, 바람직한 방향은?

행사명 『금융플랫폼 정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 |
주관행사

행사 개요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사업모형은 경제적 마찰을 완화하여 금융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시장왜곡 및 금융안정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금융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행위 방지, 공정경쟁 마련,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일시 : 2022. 4. 22(금) 14:00~15:3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ZOOM 화상 세미나)
- 주제 :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 :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플랫폼은 금융의 다양성·효율성·포용성 등을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장경쟁·안정성·소비자보호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올해 출범한 신정부는 동일기능·동일규제 기본원칙하에 디지털 생태계를 반영한 합리적인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리스크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행사명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보험연구원·한국FP학회 공동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FP학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예상치 못한 급속한 고령화속도로 인해 노후대책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이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한 바 있다. 이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적연금의 등반자로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공·사적 연금의 협력과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일시 : 2022. 8. 24(수) 14:00~16:4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ZOOM 화상 세미나)
- 주제 :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성숙 (한국FP학회 회장)
 - 축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혜경 (건국대 교수), 이흥무 (와세다대 교수), 이용만(한성대 교수)
 - 패널토론
 - 좌장 :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토론 : 조혜진 (인천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주요 내용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세미나를 온라인 증계로 개최하였다. 첫 번째(I) 세션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한계를 사적연금의 보충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두 번째(II) 세션에서는 해외의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요 결론으로,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려우므로 공·사 연금 연계 강화, 퇴직연금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등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완해 갈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본의 사적연금 지급보장 강화, 주요 선진국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주목할 제도로 논의되었다.



임베디드 금융과 보험

행사명 『임베디드 금융과 보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세미나 |
공동주관행사(금융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주관, 보험연구원 세미나 주관)

행사 개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과 소비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반 비금융 기업을 통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임베디드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베디드 보험은 소비자가 비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언제 어디서든 보험을 구매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중심 보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임베디드 보험(금융)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내 참가자들의 사업 모델 및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일시 : 2022. 9. 28(수) 14:45~16:15
- 장소 : (오프라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1F)
(온라인) <https://fintechweek.or.kr/2022>
- 주제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발표1 :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2 : 이광현 (오픈플랜 대표)
 - 발표3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좌장 : 이순재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황태영 (KPMG 이사)

주요 내용

임베디드 보험이란 비보험 상품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보험상품·서비스가 내재되어 비보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보험소비를 발생하게 도와주는 소비자 중심 보험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은 보험회사에게는 새로운 고객 접점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를, 비금융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매끄러운 보험 소비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임베디드 보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모델 시도, 생태계 중심 금융시장에 맞는 규제 정비, 데이터 활용 시 안전장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2023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금융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의 실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가 전망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가 전망된다. 보험산업은 보험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과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일시 : 2022. 10. 6(목) 7:30~9:00
- 장소 : 여의도 콘래드호텔 (스튜디오 1~3, 6F), YouTube 보험연구원
- 주제 :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발표 : 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주요 내용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인플레이션도 보험산업에 부정적이다. 2023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금융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의 실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가 전망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가 전망된다.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예년에 비해 성장세 둔화가 전망된다.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불확실성에, 장기 추세로 제도 불확실성과 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과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경제와 지속가능보험

행사명 『데이터경제와 지속가능보험』 제15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행사 개요

최근 데이터 활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및 상품 개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신뢰·협력 부족,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이중 데이터 활용, 특히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위해 개인, 조직,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소비자 효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및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일시 : 2022. 10. 12(수) 9:00~13:00
- 장소 :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1F), YouTube 파이낸셜뉴스
- 주제 : 데이터경제와 지속가능보험
- 발표 및 토론
 - 개막사 :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
 - 환영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 기조강연 : 브로나 매기 (스코르 글로벌 라이프 앤 헬스 부대표),
 - 발표 :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피터 마스 (세인트 갤런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지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패널토론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박지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주 (그레이드헬스체인 대표),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
피터 마스 (세인트 갤런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주요 내용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즉 데이터경제(Data Economy)가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이중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어

온 보험산업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보험회사는 데이터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 제공의 혜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보험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보험산업의 대응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산업 디지털혁신의 비전과 추진전략

행사명 『보험산업 디지털혁신의 비전과 추진전략』 공동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보험산업은 디지털전환을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사업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디지털전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디지털전환을 사업부문 재조정 과정으로 자원 재분배 과정을 선행하거나 병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프로세스를 확립하며,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 전략을 통한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보험산업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로 범위의 경제, 규제 전환, 사업 재조정과 경영과제로 추진전략, 혁신인프라, 조직문화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일시 : 2022. 11. 10(목) 14:00~16:30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3F)
- 주제 : 보험산업 디지털혁신의 비전과 추진전략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 발표 :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원 (한화생명 팀장), 황성환 (신한EZ손해보험 실장)
 - 패널토론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신상훈 (금융위원회 과장), 윤인근 (AIMS COO), 조혜진 (인천대학교 교수),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고객경험이 확산되고 이종산업 간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어 보험산업에서도 디지털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금융당국도 금융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효과적인 디지털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보험산업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와 더불어 현재 국내 보험회사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방안

행사명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방안』 공동정책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 공동주최)

행사 개요

퇴직연금 연금화를 증대를 위해 퇴직연금 이미지 제고, 기금형 지배구조로의 전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조속추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방안 모색, 퇴직연금 중도인출 합리적 제한, 가입자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한,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전문자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위해 수급권 강화, 규제 및 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연금화 유인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일시 : 2022. 11. 24(목) 13:30~17:00
-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타워동 (3F, 데이지홀)
- 주제 :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
 - 축사 :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 환영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김성일 (경희대학교 박사),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동현 (고용노동부 과장), 박준범 (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대표),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재현 (숭실대학교 교수),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에 도입되면서 3층 연금제도의 구조를 완성했으나,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율은 2021년 계좌 수 기준으로 4.3%에 불과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확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연금화를 증대라는 질적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금화 장애요인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행사명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 | 주관행사

행사 개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①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②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③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④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① 신상품 요율 조정 주기 단축(5년 3년), ② 보험료 조정한도($\pm 25\%$) 완화를 제안하였다.

- 일시 : 2022. 12. 8(목) 14:00~16:30
- 장소 : 코리안리(대강당, 12F), YouTube 보험연구원
- 주제 :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발표 :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권정현 (KDI 연구위원),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장성근 (EY한영회계법인 상무), 황진태 (대구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의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공급·수요에 따른 손실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Chapter 02

산학세미나

- MZ세대의 금융상품 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
- Private Efforts, Public Policy and Insurance against Pandemic Health Risks -
- 기후위기와 보험산업 -
- 금융소비자를 위한 코인경제와 조각투자의 이해 -
-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과 법적 쟁점 -
- 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
- Risk & Opportunity in global insurance asset management industry -
- 보험가격 규제 -
- 일본의 보험시장 관련 최근 동향 -

MZ세대의 금융상품 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행사명 : 제24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 28(금) 14:00~16:0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MZ세대의 금융상품 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발표 :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디지털 세대인 MZ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모든 산업이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보험업계도 MZ세대를 타겟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MZ세대의 보험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MZ세대의 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행사명 : 제25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2. 25(금) 14:00~15:3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 발표 : 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는 디지털화 가속화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등 보험시장 내 환경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의 대응과 환경변화에 따른 감독 규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Private Efforts, Public Policy and Insurance against Pandemic Health Risks

행사명 : 제26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3. 31(목) 14:00~15:2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Private Efforts, Public Policy and Insurance against Pandemic Health Risks
- 발표 :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전염병 확산을 경험하면서 마스크 및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과 검사 및 동선조사 등 정부 정책 수행이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비자의 건강보험 보유는 소비자의 건강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팬데믹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3가지 요소가 팬데믹 전염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논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기후위기와 보험산업

행사명 : 제27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4. 29(금) 14:00~15:3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1. 보험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방안 2. 보험산업의 기후 리스크 활용방안
- 발표 :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기후변화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생태계의 파괴도 심화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국제기구와 각국의 정책 변화도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과 기회요인을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기후 리스크 관련 중장기 전략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코인경제와 조각투자의 이해

행사명 : 제28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5. 19(목) 15:00~16:3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1. 조각투자의 이해 2. 코인경제의 이해
- 발표 :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예자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호사)

주요 내용

최근 코인투자, 조각투자 등 신종 재테크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저작권 조각투자가 주식투자와 유사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코인경제와 조각투자가 무엇이며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어떠한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행사명 : 제29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6. 24(금) 15:00~16:3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계약이전과 기업분할을 중심으로
- 발표 :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고령화, 디지털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과거 보험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특히 계약이전과 기업분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과 법적 쟁점

행사명 : 제30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8. 26(금) 15:00~16:3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과 법적 쟁점
- 발표 : 오영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주요 내용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자산관리와 상속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하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비즈니스 모델과 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행사명 : 제31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9. 29(목) 15:00~16:3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 발표 :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보험가격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Risk & Opportunity in global insurance asset management industry

행사명 : 제32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0. 20(목) 14:00~15:3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급변하는 글로벌 거시환경과 대체투자
- 발표 : 정삼영 (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수익률 제고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대체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가격 규제

행사명 : 제33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0. 27(목) 12:00~13:30, 보험연구원 13층 산학세미나실
- 주제 : 보험가격 규제
- 토론 :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나해인 (태평양 로펌 전 위원),
이창욱 (금융감독원 전 국장)

주요 내용

제31회 산학세미나 주제의 심층 토론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내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 제31회 학계 전문가 발표의 후속으로, 보험가격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하였다.

일본의 보험시장 관련 최근 동향

행사명 : 제34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1. 25(금) 15:00~17:0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일본의 보험시장 관련 최근 동향
- 발표 : 노동욱 (Coherent Japan Director)

주요 내용

일본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국가 중 하나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사회구조적 변화를 겪어왔으며, 장기화된 엔저와 저물가 상황에서 최근에는 높은 체감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은 일본의 보험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일본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감독 관련 주요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Chapter 03

포럼

-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을 이용한 지수형 보험 -
-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
-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
- 신화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
- IFRS 17 시행에 따른 주주배당 가능이익 영향 및 과제 -
-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 시행과 계약자배당 제도 -
-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
- 백내장 수술 관련 소송에서의 쟁점 -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을 이용한 지수형 보험

행사명 : 제34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5. 19(목) 11:00~12:30, ZOOM 화상 세미나
- 주제 :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을 이용한 지수형 보험
- 발표 : 권옥진 (세인트존스대학교 교수), 최찬열 (Wecover Platforms 대표)
- 토론 :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유승완 (보험개발원 팀장),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조재훈 (영남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방법이 리스크의 효율적 분석 및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에 어떻게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행사명 :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9. 6(화) 15:00~16:30, ZOOM 화상 세미나
- 주제 :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 발표 :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재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영학 (하나은행 팀장),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정필(KB생명 부장), 조기상 (메트라이프생명 상무), Robin Pendrigh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전무)

주요 내용

팬데믹 이후 가계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재조명된 신용생명보험과 관련하여, 국내 신용생명보험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규제와 경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행사명 :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0. 26(수) 15:00~16:20, ZOOM 화상 세미나
- 주제 :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 발표 :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곽은경 (컨슈머워치 실장),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팀장), 조은혜 (국토교통부 팀장),
조화태 (DB손해보험 상무)

주요 내용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에 적용되는 진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행사명 : 2022년 제1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7. 21(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 발표 : 전용범 (한국계리사회 부회장)
- 토론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희 (메트라이프 상무), 이재엽 (딜로이트 상무), 홍사경 (현대해상 상무)

주요 내용

2023년 도입되는 신회계제도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FRS 17 시행에 따른 주주배당 가능이익 영향 및 과제

행사명 : 2022년 제2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0. 28(금) 16:00~17: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IFRS 17 시행에 따른 주주배당 가능이익 영향 및 과제
- 발표 :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송옥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지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송영흡 (코리안리 상무),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총괄팀장),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한영만 (한화생명 상무)

주요 내용

IFRS 17 시행이 되면 금리변화에 따라 부채와 자본이 변화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배당 가능이익의 영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소시킬 방안을 논의하였다.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 시행과 계약자배당 제도

행사명 : 2022년 제3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1. 24(목) 15:00~16:30,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 주제 : IFRS 17 시행과 계약배당제도 개선방안
- 발표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김준일 (한화생명 상무), 이승수 (KB손보 상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주요 내용

부채시가평가로 인해 현행 원가방식 책임준비금에 기반한 손익분석과 계약자 배당제도에 변화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른 이슈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험법포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행사명 : 제6회 보험법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8. 12(금) 15:00~16:30, ZOOM 화상 세미나
- 주제 :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 발표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 인정 근거 및 한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백내장 수술 관련 소송에서의 쟁점

행사명 : 제7회 보험법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2. 12. 12(월) 16:00~17: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백내장 수술 관련 소송에서의 쟁점
- 발표 : 김정, 최규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 내용

백내장 수술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실무적 의견을 공유하였다.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 작업반/회의 참여 -
-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
- 언론기고 -
-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되며,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박희우 연구위원이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33권 제1호 (2022년 2월)

제목	저자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강화는 기업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양철원
가계부채 보유와 보장보험 가입 간 관계분석	이경희, 강성호
Analysis on Asymmetric Tail Dependence of Portfolio Returns	박경진, 이호진
잉여금 리스크패리티를 활용한 DB퇴직연금제도의 자산배분전략 실증분석	곽도현, 성주호

보험금융연구 제33권 제2호 (2022년 5월)

제목	저자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오차율과 내부자본시장에 관한 실증 연구	송인정, 양용준
美國 Insider Trading 法理의 形成 過程에 대한 考察 - 1909년의 Strong v. Repide 判決부터 2022년의 Insider Trading 成文化 시도까지	최자유
Corporate Innovation and Maturity Structure of Debt	최종범, 김동검
통화정책 운영체제별 정책효과 비교, 분석	허준영

보험금융연구 제33권 제3호 (2022년 8월)

제목	저자
금융이해력, 거주지와 개인연금 및 보장성 보험 가입의 관계	손준호, 박소정
공유된 임의효과를 고려한 다중 위험 보험의 요율에 관한 연구	전옥현, 정희찬, 최양호, 심현우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조석희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아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중심으로	전희주, 최경진

보험금융연구 제33권 제4호 (2022년 11월)

제목	저자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 유인과 기업의 부도 가능성: 소유-지배 괴리도와 부도 거리의 관계	변희섭
Cox-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해지 위험 영향요인 연구: 주택연금 피보증인을 대상으로	최경진, 김석영, 전희주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정원석
우리나라 통화수요함수의 장기균형 관계와 안정성: ARDL 모형을 중심으로	황진태, 김성민

2. 작업반/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작업반을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각종 작업반/회의

작업반·회의 명	주최
보험업법 TF	금융위원회
펫보험활성화 TF	금융위원회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금융위원회
금융업법 전면개정 핵심제도TF	금융위원회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금융위원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금융위원회
Defi 관련 TF	금융위원회
고령자, 장애인 금융제약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TF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리스크 대응 TF	금융위원회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관련 실무 TF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역머니무브 점검 TF	금융위원회
IFRS 17 법규개정추진단 전문가 자문단	금융감독원
계약자배당 TF	금융감독원
IFRS 17 가정 리뷰 TF	금융감독원
보험 승환제도 개선 TF	금융감독원
할인율 운영방안 마련 TF	금융감독원
보건의료 선도과제 TF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30년 국채선물협의체	기획재정부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 분석 TF	감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TF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TF	중소벤처기업부
상시개선 협의체 관련 광고 규제 개선 검토 TF	손보협회
비대면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TF	한국개발연구원
보험 적용지원 TF	한국회계기준원
환경책임보험 손해사정 전문성 제고 TF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중장기발전방안 TF	한국무역보험공사
드론보험 정보종합 네트워크 구축 TF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3.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업권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포럼, 패널, 자문 등에 참여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감독)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국회(연금특위)/복지부
자동차보험정비협약체 공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 전원위원회	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 소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국토교통부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심의회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년금융전문가 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예산심의회	금융위원회
MG손해보험 경영평가위원회	금융감독원
풍수해보험심의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타 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중요지표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자동차보험정비협약체 공익위원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보망 운영위원회	보험개발원
위험관리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차등평가지표 실무협의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포럼/패널/자문

포럼·패널·자문 명	주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기획재정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미래포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	환경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문가 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4. 언론기고

2022년 1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한국은행을 압박하지 말자	헤럴드경제	윤성훈
2022년 '위드 코로나'와 보험산업 전망	한국보험신문	최 원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노후'를 생각한다	매일경제	원 장
사이버위험 대응,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송윤아
의료데이터 활용 절실하다	헤럴드경제	원 장
설상가상의 연금개혁, 가래로 막을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아주경제	강성호

2022년 2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상생의 연금개혁 조건을 찾아야	한국보험신문	강성호
보험업 규제체계 발전 방향	신아일보	임 준
살인에 이르는 보험사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매일경제	원 장
전쟁 리스크, 보험으로 가능할까	서울경제	원 장
연금개혁의 동반자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	한국보험신문	강성호
건강보험 보장률을 다시 생각해보자	헤럴드경제	이태열
2002~2022년 보험상품의 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보험신문	김규동

2022년 3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규제 개선	한국금융신문	양승현
디지털전환시대의 보험산업	아주경제	황인창
자동차보험 계약자 소외에 대한 소고	헤럴드경제	전용식

2022년 4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보험산업,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대한금융신문	김세중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의 딜레마	아주경제	윤성훈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3.6%의 의미	헤럴드경제	윤성훈

5.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각종 금융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 사례가 대다수이다.

IV

2023년
주요 연구계획

1

보험시장 리스크관리

보험사기 판례 연구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의 유형,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의 근거, 양형 수준 등을 분석 및 정리하고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시사점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겠다.

국내 중소기업 일반손해보험 가입·수요에 대한 연구

김혜성(연구위원) | 보고서

국내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고, 그 결과 중소기업 보험시장 침투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으로써 중소기업 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가입 현황, 보장공백의 수준과 원인, 잠재 보험수요 등을 분석한다.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확장성)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변혜원(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보고서

위험보장공백 해소방안 및 관련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의 위험성향, 위험인식 및 위험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보장공백 경감을 위한 인식전환이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되 베이비붐세대, 에코세대, 밀레니얼세대로 정의하는 세대별 특성 차이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산관리시장 전망과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임준(연구위원) | 보고서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국내 자산관리시장은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고령층 대상 자산관리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변화에 따른 자산관리시장 변화를 전망해보고, 자산관리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손재희(연구위원) | 보고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전자금융업 활용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법 개정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해외 보험회사의 활용 사례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전자금융 기반 사업의 다양한 기회요인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확장성)

보험산업과 데이터 거래소

박희우(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의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 시장이 발달하였지만, 우리나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서 보험회사의 참여는 저조한 수준이다. 데이터 거래소에서 보험업권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정책·제도 변화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선(연구위원) | 보고서

공·사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간의 정책·제도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상호 의존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실손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의 정책변화가 각 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정원석(연구위원) | 보고서

새정부 출범 이후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는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의 강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적연금을 모두 활용하여 연금개혁의 두 가지 목표 달성 방안을 수리 분석 및 해외사례 등을 통해 탐색한다.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확장성)

주요국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전기·하이브리드차의 도입 및 확산에 따라 자동차사고 유형 및 운전행태의 변화 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및 배터리 관련 기술 전망과 더불어 전기차의 위험요인, 보상 관행, 보험료 동향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다.

우리나라 치매 정책에 대한 연구

위탁연구용역 | 보고서

최근 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주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 확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주요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역동성)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규제 개선방향

이정우(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빅테크가 보험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빅테크의 첨단 기술은 보험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만, 규제차익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해외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면서도 보험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한 적정선을 연구한다.

보험모집 수수료에 관한 연구

김동겸(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 간 수수료 과열 경쟁, 선지급 방식의 수수료 체계,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은 보험산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보험모집 수수료 실태 및 관련 제도,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채널 다양화 성과 및 개선 방안 연구

위탁연구용역 | 보고서

2000년대 이후 대면 전속영업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보험모집시장에 법인보험대리점(GA),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매채널의 운영 실태 및 성과, 소비자들의 인식과 평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보험모집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지속가능성)

IFRS17 영향 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노건엽(연구위원) | 보고서

IFRS17이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IFRS4와 비교하여 보험회사 자본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제표에 보험계약의 미래 이익, 예정 대비 실제 차이가 표시되므로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연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상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지속가능 공시규제에 관한 국제기준 관련 논의와 함께 주요국의 지속가능 공시규제 도입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논의 과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 공시규제 도입에 따른 일반적인 시사점과 함께 보험 및 금융산업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규제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황현아(연구위원) | 보고서

규제 및 분쟁 측면에서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설명의무 본래의 목적과 기능, 보험계약 체결의 현실,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설명의무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 설명의무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지속가능성)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의학기술 발달로 다양한 수술기법이 개발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의식도 제고되면서 보험자가 보장하는 수술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 약관상 수술의 개념 변천 및 그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연구해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필요 시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연구를 수행한다.

의료자문 및 의료심사제도에 대한 연구

김경선(연구위원) | 보고서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 민원 제기,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 보험산업의 의료자문 및 의료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보고서

금융시장 혼란과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 예상하기 쉽지 않으며, IFRS17, K-ICS 등 시가평가 기준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4년 보험산업 전망은 기존의 방법론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하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전망 및 진단하고, 보험산업의 당면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

2022년
일반현황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5대 안철경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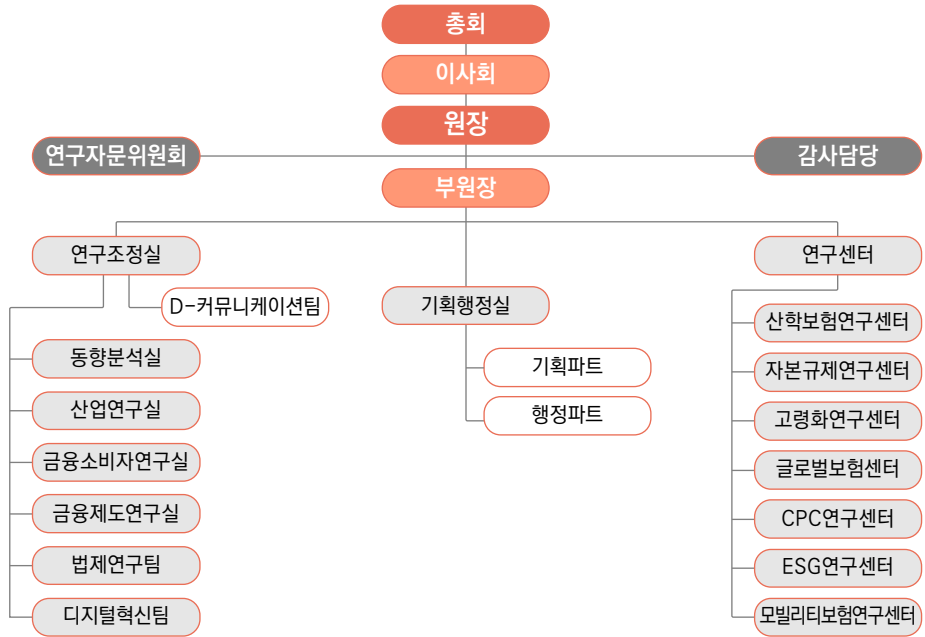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보험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9년 4월	5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2개사, 손해보험회사 18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 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22년에는 2022년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에는 2022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22년에는 10월에 개최하였다.

연구자문위원회

성명	자문 분야	소속 및 직위
김현수	위원장	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상훈	보험정책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성주호	생명/연금	경희대학교 교수
오영수	소비자보호	김앤장 고문
성영애	소비자보호	인천대학교 교수
이민환	금융기관론	인하대학교 교수
김용하	사회안전망	순천향대학교 교수
정세창	마케팅	홍익대학교 교수
김종선	손해보험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이사

4. 임직원 현황

(2022.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28	21	4	10	3	7	74

2022 연차보고서

발 행 인 안철경
편집위원장 정성희
편 집 위 원 김형진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23. 1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22 연차보고서